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60호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나. 장애인공무원의 전보 시 의견 반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의3).

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 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juan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대전광역시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편의지원”을 “편의 등 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
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전보 의견 반영)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한 <u>편의지원</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편의 등 지원</u> ----- -----
<u><신 설></u>	제4조의2(교육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화된 특수 훈련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u><신 설></u>	제4조의3(전보 의견 반영)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u>장애등급</u> ,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장애정도</u>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